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March, 2022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법률 뉴스

01. 양 부서, 영세기업의 "6세2비" 감면 정책 실시
02. 시장감독관리총국 <외상투자기업 수권등기 관리방법> 발표
03. 최고인민법원 인터넷 소비분쟁 사건 관련 사법해석 발표
04. 3 부서: 비학과류 사교육기관 일시불로 3개월 이상 비용 수취 불가
05. 은보감회 보험회사의 비생명보험업무 준비금 관리에 대한 규범 발표
06. 국가연초국 <전자담배 관리법> 발표
07. 최고인민법원, 부정경쟁방지법 사법해석 출시
08. 시장감독관리총국 <의료기기 생산감독관리방법> 등 발표

2. 최신법률법규 (별첨)

01. <영세기업의 "6세2비" 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공고>
02. <외상투자기업 수권등기 관리방법>
03. <인터넷 소비분쟁 사건의 심리에 관한 법률적용 관련 규정(1)>
04. <비학과류 사교육기관 규범에 관한 공고>
05. <보험회사 비생명보험업무 준비금 관리방법 실시세칙(1-7호)>
06. <전자담배 관리방법>
07.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해석》
08. <의료기기 생산감독관리방법>
09. <의료기기 경영감독관리방법>

3. 노동법문답

상해시 통제기간 실시 중 회사와 직원의 노동계약 이행에 관한 문제

1. 법률 뉴스

01. 양 부서, 영세기업의 “6 세 2 비” 감면 정책 실시

출처: 경제일보

[내용개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연합하여 <영세기업의 “6 세 2 비” 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하고 집행기간을 2022 년 1 월 1 일부터 2024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고 하였다. <공고>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거시적 조정 수요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소규모납세자, 소형저이윤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50%의 세액범위 내에서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제외), 경작지점용세와 교육비 부가세, 지방교육 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소규모납세자, 소형저이윤기업과 자영업자가 이미 법에 따라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와 교육비 부가세, 지방교육 부가세의 다른 우대정책을 향유한 경우, 본 <공고> 제 1 조에 규정하는 우대정책을 중복하여 향유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财政部、国家税务总局 4 日发布《关于进一步实施小微企业“六税两费”减免政策的公告》，将省级人民政府在 50%税额幅度内减征“六税两费”的适用主体，由增值税小规模纳税人扩展至小型微利企业和个体工商户，执行期限为 2022 年 1 月 1 日至 2024 年 12 月 31 日。

“六税两费”是指资源税、城市维护建设税、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印花税（不含证券交易印花税）、耕地占用税和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允许地方政府在一定幅度内减征“六税两费”，是减税降费政策措施的重要组成部分。

两部门发布公告明确，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本地区实际情况，以及宏观调控需要确定，对增值税小规模纳税人、小型微利企业和个体工商户可以在 50%的税额幅度内减征“六税两费”。

根据公告，增值税小规模纳税人、小型微利企业和个体工商户已依法享受“六税两费”其他优惠政策的，可叠加享受上述减征优惠政策。其中，公告所称小型微利企业，是指从事国家非限制和禁止行业，且同时符合年度应纳税所得额不超过 300 万元、从业人数不超过 300 人、资产总额不超过 5000 万元等 3 个条件的企业。

今年我国将实施新的更大力度减税降费，一系列政策措施在近期相继明确。例如，延长阶段性税费缓缴政策，将去年四季度实施的制造业中小微企业延缓缴纳部分税费政策，延续实施 6 个月；加大中小微企业设备器具税前扣除力度；延续服务业增值税加计抵减政策；等等。

“今年，党中央、国务院部署实施组合式、规模性减税降费政策，重点聚焦支持中小微企业、个体工商户、制造业等发展，帮助困难行业渡过难关。税务部门将采取一系列有效措施确保政策落实落细，为服务‘六稳’‘六保’大局、稳定宏观经济大盘贡献税务力量。”国家税务总局收入规划核算司司长蔡自力表示。

02. 시장감독관리총국 <외상투자기업 수권등기 관리방법> 발표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

[내용개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외상투자기업 수권등기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였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방법>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전국의 외상투자기업 등기관리를 책임지며 또한 <방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지방정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외상투자기업 등기관리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또한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정부의 시장감독관리부서(피수권국)은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외상투자기업 등기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승인 없이 외상투자기업 등기관리 업무를 전개하거나 편법적으로 전개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市场监管总局发布修订后的《外商投资企业授权登记管理办法》（以下简称《办法》），并将于2022年4月1日起正式施行。

为了贯彻落实《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及其实施条例有关规定，依法做好外商投资企业授权登记管理工作，提升外资投资企业登记管理水平，市场监管总局对《办法》进行了修订。《办法》修订主要考虑四个方面。

一是明确《办法》具体制定依据和管理范围。《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实施条例》是制定《办法》的上位法依据。《办法》适用于外商投资企业及其分支机构，外国公司分支机构以及其他依照国家规定应当执行外资产业政策的企业、港澳台投资者投资设立企业及其分支机构登记管理的授权和规范，参照执行。同时，鉴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条例》和《外国（地区）企业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登记管理办法》对外国（地区）企业常驻代表机构、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外国（地区）企业的登记机关已作规定，《办法》删除了“外国（地区）企业常驻代表机构、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外国（地区）企业”。

二是强调外商投资企业的授权管理制度和登记机关。市场监管总局负责全国外商投资企业登记管理，并可以根据本《办法》规定条件，授权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承担外商投资企业登记管理工作。未经市场监管总局授权，不得开展或者变相开展外商投资企业登记管理工作。市场监管总局应在官网公布其授权的市场监督管理部门名单。

三是简化申请外商投资企业登记管理授权的条件材料。结合社会经济发展实际，删除和修改了“已从事外商投资企业登记初审和登记违法违规行为调查等工作 2 年以上”“外商投资企业登记管理专职机构将统一行使外商投资企业核准登记权和监督管理权”“计算机网络建设标准”等条件。不再要求提交“同级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部门或者上级工商行政管理局批准申请局成立外商投资企业登记管理专职机构及人员编制的文件”等材料。

四是强化被授权市场监管部门的登记审查、授权变更等责任。明确被授权单位要严格执行外商投资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制度。被授权局名称等情况发生变化或者不再履行外商投资企业登记管理职能的，应当由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及时向总局申请变更或者撤销授权。

03. 최고인민법원 인터넷 소비분쟁 사건 관련 사법해석 발표

출처: 인민법원보

[내용개요: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 소비분쟁 사건의 심리에 관한 법률적용 관련 규정(1)>(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규정>은 총 20 조로, 인터넷 소비계약의 권리의무, 책임주체의 인정, 생방송 경영판매의 민사책임, 배달음식업의 민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규정>은 생방송 경영판매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생방송 경영판매 플랫폼의 자체 경영책임, 생방송 운영자의 진실한 정보 제공 불가 시 선지급책임, 식품 경영의 자질심사 의무 미진의 연대책임과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의 연대책임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伴随网络经济的快速发展，网络消费纠纷案件快速增长。为正确审理此类案件，依法保护消费者合法权益，促进网络经济健康持续发展，今天上午，最高人民法院举行新闻发布会，发布《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网络消费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一）》（以下简称《规定》，全文及答记者问见二版）。最高人民法院民一庭庭长郑学林、副庭长刘敏、法官高燕竹出席发布会并回答记者提问。发布会由最高人民法院新闻发言人李广宇主持。

党的十八大以来，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高度重视发展数字经济，将其上升为国家战略。习近平总书记多次就网络治理、平台经济作出重要指示。他指出，要健全完善规则制度，加快健全平台经济法律法规，及时弥补规则空白和漏洞，推动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郑学林表示，正是在这一背景下，最高人民法院坚持以人民为中心、贯彻落实新发展理念、遵循网络消费特点、立足现状并预留未来创新空间等原则，深入调研，反复研究论证，制定出台《规定》，对网络消费合同权利义务、责任主体认定、直播营销民事责任、外卖餐饮民事责任等方面作出详细规定。

实践中存在电子商务经营者利用优势地位，制定不公平不合理的格式条款侵害消费者合法权益的情况。郑学林表示，《规定》第一条对于“签收商品即视为认可商品质量符合约定”“经营者享有单方解释权或者最终解释权”等实践中常见的不公平不合理的格式条款进行了列

举，并作兜底性规定，明确有上述内容的格式条款应当依法认定无效。

《规定》完善七日无理由退货制度，加强消费者售后权益保障，规定消费者因检查商品的必要对商品进行拆封查验且不影响商品完好，电子商务经营者不得以商品已拆封为由主张不适用七日无理由退货制度，同时明确法律另有规定的除外。

郑学林指出，《规定》还明确了电商平台自营误导的法律后果，明确规定即使电商平台不是实际开展自营业务，但其所作标识等足以误导消费者相信其系平台自营的，电商平台经营者也要承担商品销售者或者服务提供者责任，压实了平台责任。

《规定》还通过明确平台外支付的法律后果，压实商家责任。明确网络店铺转让未公示责任，保护消费者合理信赖。

《规定》明确虚假刷单、刷评、刷流量合同无效，斩断网络消费市场“黑灰产”链条。明确奖品、赠品、换购商品等造成损害的法律后果，即电子商务经营者应当承担赔偿责任，不得以奖品、赠品属于免费提供或者商品属于换购为由主张免责，规范网络促销行为。明确高于法定赔偿标准的承诺应当遵守，强化经营者诚信经营意识。明确网络直播营销民事责任，引导新业态健康发展。完善外卖餐饮民事责任制度，守护人民群众舌尖上的安全。

中国消费者协会投诉部主任陈剑、中国人民大学法学院教授朱虎参加了本次新闻发布会，在会后接受了记者采访。

“电子商务平台经营者依法应承担的责任一概由平台内经营者承担；排除或者限制消费者依法投诉、举报、请求调解、申请仲裁、提起诉讼的权利”，朱虎提出，《规定》对典型的“不公平、不合理”的格式条款进行了明确列举，有助于统一法律适用，保障消费者合法权益，督促电子商务经营者优化交易机制。他注意到，《规定》还通过 7 个条文系统规定了当消费者因直播购物而合法权益受损时，平台内经营者、直播间运营者、网络直播营销平台经营者等相关主体应当依法承担的民事责任，体现了多层次综合治理的理念。

陈剑指出，现实生活中，虚构用户评价、销售伪劣商品、寄送变质外卖等侵害消费者合法权益现象频发，导致产生诸多网络消费纠纷，引发社会各界的强烈关注。在此背景下，最高人民法院出台《规定》，聚焦网络消费领域中群众反映强烈的突出问题，切实加大了对消费者合法权益的保护力度。广大消费者应及时深入学习这一司法解释，维护好自身合法权益。

专家表示，《规定》既鼓励新技术、新业态、新模式的探索创新，以加快释放新兴消费潜力，也注重规范引导网络经济的健康持续发展，体现了鲜明的中国特色、实践特色和时代特色。

郑学林表示，下一步，人民法院将进一步发挥审判职能作用，为保护消费者合法权益和促进数字经济健康持续发展提供有力司法服务和保障。

04. 3 부서: 비학과류 사교육기관 일시불로 3개월 이상 비용 수취 불가

출처: 베이징청년보

[내용개요: 교육부 등 3 부서는 공동으로 <비학과류 사교육기관 규범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하였다. <공고>에 따르면, 비학과류 사교육기관은 <초·중등학생 사교육 서비스계약(시범양식)>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자신의 요금 징수 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원가 위조, 허위 할인, 허위 홍보 등 방식으로 부정한 경정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독점행위를 예방, 제지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격사기행위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 동시에 <공고>는 비학과류 사교육기관의 예비비용을 본 기관의 수금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 대출방식으로 교육비를 납부하여서는 아니되며, 3 개월이 경과하거나 또는 60 교시를 초과하는 비용을 일시불로 받거나 충전, 회차카드 등 형태로 변칙적으로 징수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教育部、国家发改委、市场监管总局于 2022 年 3 月 3 日发布关于规范非学科类校外培训的公告，要求非学科类培训不得一次性收取或以充值、次卡等形式变相收取时间跨度超过 3 个月或 60 课时的费用。

公告要求，非学科类校外培训机构应当遵循公平、合法、诚实信用的原则，根据市场需求、培训成本等因素合理确定培训收费项目和标准。培训收费应当实行明码标价，培训内容、培训时长、收费项目、收费标准等信息应当向社会公开，接受公众监督。全面使用《中小学生校外培训服务合同（示范文本）》，严格履行合同义务，规范自身收费行为。禁止以虚构原价、虚假折扣、虚假宣传等方式进行不正当竞争，预防和制止垄断行为，禁止任何形式的价格欺诈行为。机构预收费须全部进入本机构收费专用账户。面向中小学生的培训不得使用培训贷方式缴纳培训费用。不得一次性收取或以充值、次卡等形式变相收取时间跨度超过 3 个月或 60 课时的费用。

行业组织应当发挥行业自律作用，引导培训机构合理定价，规范校外培训服务，不得以非

学科类培训名义违规开展学科类培训，自觉维护市场秩序和行业形象。对非学科类校外培训机构的违法违规行为，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向教育、市场监管、发展改革等部门申诉、举报。

05. 은보감회 보험회사의 비생명보험업무 준비금 관리에 대한 규범 발표

출처: 중국경제넷

[내용개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비생명보험업무 준비금 관리방법 실시세칙(1-7 호)>를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준비금 평가의 원칙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보험회사의 준비금 평가에 합리적인 방법과 가설을 사용하도록 규범화하였다. 2. 준비금 평가의 내부통제과정을 규정하였다. 3. 준비금의 위험 한계와 환가에 대한 처리를 규범화하고 위험 한계의 산정 방법은 일단 확정되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4. 보험회사의 지점에 대한 준비금의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지점에 대한 준비금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점의 경영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인위적인 조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5. 준비금 소급분석작업을 규범화하였다. 6. 준비금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공개해야 할 구체정보와 정산 의견의 표현을 규범화하였다. 7. 준비금 평가 작업의 초안제도를 보완하였다.]

银保监会近日发布新修订的《保险公司非寿险业务准备金管理办法》(下称《办法》), 进一步完善非寿险业务准备金监管制度, 提升保险公司准备金管理水平。针对保险公司分支机构准备金随意调节等焦点问题, 《办法》从监管制度及法律责任上进行了明确及细化, 堵住了漏洞, 补足了监管制度短板。

非寿险业务, 是指除人寿保险业务以外的保险业务, 包括财产险、短期健康险和意外伤害保险业务等, 以及上述业务的再保险业务。提取准备金是保险公司为了应对未来赔付等支出而提存一笔资金。合理的准备金提取至关重要, 关系到保险公司偿付能力评估、盈利能力评估等多个方面。

与修订前相比, 《办法》将非寿险准备金评估规则与会计准则、偿二代监管制度协调一致; 总结提炼非寿险准备金监管的实践经验, 将相关规范性文件中关于准备金监管的制度进行了梳理, 集中体现在《办法》中。据银保监会披露的前三季度经营数据计算, 非寿险业务保费收入占行业总保费收入近 46%。《办法》的实施将对市场上近一半的保险业务活动产生影响,

覆盖所有保险公司。

银保监会有关部门负责人表示，原保监会于 2005 年颁布《保险公司非寿险业务准备金管理办法(试行)》(下称《试行办法》)。当时，非寿险行业精算管理处于发展中的阶段，市场环境也比较简单，《试行办法》的发布主要是为了规范非寿险准备金的计提方法，而在内控管理、监督管理、法律责任等方面有所缺失。

业内人士介绍，长期以来，一些保险公司利用管理不健全，在实际经营中通过随意调节准备金调控利润，并影响偿付能力计量的准确性。近年来的监管通报中常有提及，个别保险公司公司准备金提取不足、总公司本级留存准备金，形成较大不利偏差，不仅扭曲了监管部门对公司保单业务质量的判断，又积累了赔付风险。

针对这些问题，《办法》增加内控管理规定，明确提出：准备金评估方法、假设的调整对保险公司产生显著影响的，应经总精算师同意后，提交公司董事会决议，或由董事会正式授权公司经营管理层决策机构审议。保险公司应建立分支机构的准备金评估或分摊机制，不得违规调整分支机构的准备金。保险公司总公司不直接经营业务的，不得在总公司本级留存准备金。

为了加强监管力度，提高对违法违规行为的查处，《办法》增加了监督管理规定和法律责任规定。保险公司未按照规定提取或者结转各项责任准备金，情节严重的，可以限制其业务范围、责令停止接受新业务或者吊销业务许可证；对直接负责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情节严重的，撤销任职资格。

上述负责人表示，《办法》的发布将有利于进一步完善非寿险业务准备金的监管制度，增强非寿险准备金监管的科学性和有效性，提升保险公司准备金管理水平。一方面《办法》使非寿险准备金监管制度与会计准则及偿付能力监管规定做到了协调统一，为保险公司的非寿险准备金评估和管理提供了更加完善、可循的制度依据；另一方面，《办法》补齐了非寿险准备金监管制度的短板。

06. 국가연초국 <전자담배 관리법> 발표

출처: 금융계

[내용개요: 중국 국가연초국은 <전자담배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담배의 정의 및 감독 대상을 명확히 한다. 둘째, 전자담배의 생산·도매 및 소매 주체에 대해 허가관리를 실시하고 전자담배 허가증 관리에 행정허가 종류를 신설하지 않으며, 담배 전문판매 생산·도매 및 소매 허가증 허용범위에만 해당 항목을 추가한다. 셋째, 전자담배 판매에 대해 루트 관리를 실시하고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며, 전자담배 판매 방식을 규범화한다. 넷째, 전자담배 제품의 품질 전반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 전자담배 제품의 기술 심사와 추적 체계를 세운다. 다섯째, 법에 따라 전자담배 운송 및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실시한다.]

国家烟草专卖局网站发布了《电子烟管理办法》，将于5月1日正式施行。主要内容为：一是明确电子烟定义和监管对象；二是对电子烟生产、批发和零售主体实行许可证管理，电子烟许可证管理不新设行政许可种类，仅在烟草专卖生产、批发和零售许可证的许可范围中增加相应条目；三是对电子烟销售实行渠道管理，建立电子烟交易管理平台，规范电子烟销售方式；四是对电子烟产品质量进行全程管理，建立电子烟产品技术审评和跟踪追溯机制；五是对电子烟运输和进出口依法实施监管。

《电子烟管理办法》政策解读

2021年11月10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的决定》（国令第750号，以下简称《决定》）正式公布施行。按照新修改的《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为进一步加强电子烟等新型烟草制品的监管，规范市场秩序，维护消费者合法权益，国家烟草专卖局研究制定了《电子烟管理办法》（以下简称《管理办法》）。现就有关情况解读说明如下：

一、《管理办法》的制定背景和过程

近年来，由于存在监管空白，电子烟产业无序发展，一些产品存在烟碱（尼古丁，下同）含量不清、添加成分不明、烟油泄漏等问题，特别是部分经营者宣传误导消费者，诱导未成年人吸食，侵害未成年人身心健康。社会各界反映强烈，不断呼吁加强监管。党中央、国务院对此高度重视，决定修改《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依法加强对电子烟等新型烟草制品的监管。2021年11月10日，《决定》正式公布施行，明确“电子烟等新型烟草制品参照本条例卷烟的有关规定执行”。

为深入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做好电子烟监管工作，依法履行监管职责，规范电子烟市场秩序，保护人民健康安全，促进产业治理法治化、规范化，《决定》公布施行后，国家烟草专卖局在充分调研评估的基础上，结合电子烟产品特点和市场发展情况并吸收国际监管经验，研究起草了《管理办法（征求意见稿）》，并按照行政规范性文件制发要求，广泛征求了社会公众、相关单位、电子烟企业及一线监管人员等有关方面的意见。《管理办法》于2022年3月11日公布，5月1日正式施行。

二、《管理办法》的主要内容

《管理办法》包括总则、生产与质量管理、销售管理、进出口贸易和对外经济技术合作、监督检查、附则，共六章四十五条，对中华人民共和国境内电子烟生产、销售、运输、进出口和监督管理等活动做出了规定。

主要内容为：一是明确电子烟定义和监管对象；二是对电子烟生产、批发和零售主体实行许可证管理，电子烟许可证管理不新设行政许可种类，仅在烟草专卖生产、批发和零售许可证的许可范围中增加相应条目；三是对电子烟销售实行渠道管理，建立电子烟交易管理平台，规范电子烟销售方式；四是对电子烟产品质量进行全程管理，建立电子烟产品技术审评和跟踪追溯机制；五是对电子烟运输和进出口依法实施监管。

07. 최고인민법원, 부정경쟁방지법 사법해석 출시

출처: 인민법원 뉴스미디어 본사

[내용개요: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을 발표하고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해석》은 총 29 조로 모조 혼동(仿冒混淆)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1 개 조문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 6 조의 "모조 혼동" 규정을 중점적으로 세분화하였다. 첫째, <해석> 제 4 조는 "일정한 영향이 있는" 표지의 정의와 인정 고려 요소를 명확히 한다. 둘째, <해석> 제 7 조는 상표법상 사용할 수 없는 표지에 해당하는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셋째, <시장주체등록 관리조례> 제 2 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명칭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장 주체의 범위를 세분화하였다.]

3月17日,《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若干问题的解释》(以下简称《解释》)发布,自2022年3月20日起施行。《解释》共29条,根据修订后的反不正当竞争法,重点对反不正当竞争法第二条、仿冒混淆、虚假宣传、网络不正当竞争等行为认定作出细化。

反不正当竞争法实施以来,一般条款(反不正当竞争法第二条)已成为人民法院认定新类型不正当竞争行为的主要法律依据之一,但裁判标准不统一的现象时有发生。为此,《解释》规定,经营者扰乱市场竞争秩序,损害其他经营者或者消费者合法权益,且属于违反反不正当竞争法第二章及专利法、商标法、著作权法等规定之外情形的,人民法院可以适用一般条款予以认定。

最高人民法院民三庭负责人表示,这一规定既厘清了一般条款与具体行为条款、知识产权专门法规定之间的适用关系,也明确了一般条款对反不正当竞争法及商标法等其他知识产权专门法的兜底适用地位。

人民法院运用一般条款认定市场竞争行为正当与否，核心是判断经营者是否违反了商业道德。《解释》明确了反不正当竞争法中的商业道德不等同于日常道德标准，而是特定商业领域普遍遵循和认可的行为规范。同时规定，人民法院应当结合案件具体情况，综合考虑行业规则或者商业惯例、经营者的主观状态、交易相对人的选择意愿、对消费者权益、市场竞争秩序、社会公共利益的影响等因素，依法判断经营者是否违反商业道德。

2021年，全国法院审结不正当竞争纠纷案件8654件，其中仿冒混淆行为案件数量占比很大。《解释》重点对反不正当竞争法第六条“仿冒混淆”的规定进行了细化，明确了“有一定影响的”标识的含义和认定考量因素，明确属于商标法禁用禁注范围的标志也不能获得反不正当竞争法的保护。《解释》还参照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规定，细化了名称可以受到保护的 market 主体的范围。

近年来，网络不正当竞争纠纷日益增多。考虑到互联网行业技术和商业模式更新发展快，《解释》未进一步列举新的行为方式，而是严格把握立法精神和竞争政策，及时总结司法实践经验，对法律适用条件作出适当细化，为司法裁判提供必要规则指引，同时为市场的自我调节和技术创新留出空间。

据介绍，《解释》是最高人民法院深入学习贯彻习近平法治思想、充分发挥知识产权审判职能作用、及时回应新领域新业态司法需求的重要举措，对于加强反不正当竞争司法，强化竞争政策基础地位，促进形成高效规范、公平竞争的国内统一市场具有重要意义。

08. 시장감독관리총국 <의료기기 생산감독관리방법>등 발표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

[내용개요: 국가지장감독관리총국은 <의료기기 생산감독관리방법>과 <의료기기 경영감독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방법>은 의료기기 등록자 등록준비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행정허가 처리절차를 최적화하며, 감독검사조치를 강화하고 감독검사 수단을 보완하며, 기업주체의 책임을 다지는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기업의 주체적 책임 다지기에 관하여 <방법>은 의료기기 생산보고제도를 수립하고, 생산제품품목 보고, 생산동향 보고, 생산조건변화 보고와 품질관리체계 운영상황 자체조사 연도보고 등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허가등록절차를 최적화하고, 의료기기 등록자제도의 경영허가, 등록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조정한다고 하였다.]

市场监管总局发布修订后的《医疗器械生产监督管理办法》和《医疗器械经营监督管理办法》，自2022年5月1日起施行。

医疗器械安全与人民群众健康息息相关，两个办法严格贯彻落实“四个最严”要求，落实《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规定，全面落实医疗器械注册人备案人制度，优化行政许可办理流程，强化监督检查措施，完善监督检查手段，夯实企业主体责任，并进一步加大对违法行为的处罚力度。

落实最严格的监管要求。强化对医疗器械注册人的监督管理，明确注册人和受托生产企业双方责任，将委托生产管理有关要求纳入质量管理体系，并进一步完善了医疗器械生产环节的检查职责、检查方式、结果处置、调查取证等监管要求。完善经营环节销售、运输、贮存等方面管理要求，细化进货查验、销售记录等追溯管理相关规定，强化注册人、备案人销售其注册、备案的医疗器械的质量安全责任。

夯实医疗器械生产经营企业主体责任。建立医疗器械生产报告制度，规定生产产品品种报告、生产动态报告、生产条件变化报告和质量管理体系运行情况自查年度报告等要求。同时，优化许可备案流程，对医疗器械注册人制度下有关经营许可、备案等要求进行调整，取消许可时提交营业执照及有关证明文件要求，进一步压缩核查审批时限，明确了免于提交申请资料和免于经营备案的具体情形，并对同时申请许可和备案的，简化了材料提交等程序要求。

压实部门监管责任。细化完善各级监管部门职责，健全监督检查、重点检查、跟踪检查、有因检查和专项检查等多种监督检查形式。明确了注册人跨省委托生产情形下的药品监管部门的职责要求，明确跨区域监督检查、调查取证等方面联合和协助规定，新增经营环节延伸检查和联合检查相关规定，并完善了境外检查以及信息公开和责任约谈等管理制度。

强化质量安全风险管控。结合监管工作实际进一步细化完善了医疗器械生产经营分级管理及风险控制、有因检查要求。强化质量安全风险把控，分类明确生产经营监督检查的重点，对为医疗器械注册人、备案人和经营企业专门提供运输、贮存服务的明确质量责任和管理方面的要求。同时，明确药品监管部门应当根据监督检查、产品抽检、不良事件监测、投诉举报、行政处罚等情况，定期开展风险会商研判，做好医疗器械质量安全隐患排查和防控处置工作。

2.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영세기업의 “6 세 2 비” 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공고> 
- 02. <외상투자기업 수권등기 관리방법> 
- 03. <인터넷 소비분쟁 사건의 심리에 관한 법률적용 관련 규정(1)> 
- 04. <비학과류 사교육기관 규범에 관한 공고> 
- 05. <보험회사 비생명보험업무 준비금 관리방법 실시세칙(1-7 호)> 
- 06. <전자담배 관리방법> 
- 07.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해석》 
- 08. <의료기기 생산감독관리방법> 
- 09. <의료기기 경영감독관리방법> 

3. 노동법문답

◆ 상해시 통제기간 실시 중 회사와 직원의 노동계약 이행에 관한 문제

1. 통제기간에 직원이 재택근무 시, 회사의 급여 지급방식은 어떠한지.

▶ 답변: 통제기간에 회사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함. 만일 주말 연휴에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별도로 휴가를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이 불가능할 경우 일당 기준 200%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또한 청명절(4 월 5 일)에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회사는 일당 기준 300%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2. 통제기간에 회사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직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 답변: 통제기간에 회사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직원은 복종해야 하며, 만일 직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기업은 규장제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3. 통제기간 중, 직원이 지역 핵산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답변: 통제기간 중, 직원은 소재 지역의 핵산검사에 협조해야 함.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비상사태 시 법에 따라 발령된 결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공안기관은 위반자를 상대로 <치안관리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와 벌금, 또는 행정구류 처벌을 할 수 있음. 해외 유출 전파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만일 직원이 국가법률 규정과 정부부서의 정책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은 규장제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4. 통제기간 중, 직원이 핵산검사에 참가하지 않아 건강큐알코드가 "옐로코드"로 변경될

경우, 통제기간이 끝난 후 회사는 해당 직원의 사무실 출입을 거절할 수 있는지.

- ▶ 답변: 회사는 해당 직원의 출입을 거절할 수 있음. 통제기간이 끝난 후, 직원이 회사에 출근할 때, 만일 통제기간의 핵산검사 음성보고가 없을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즉시 근처의 핵산 검측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만일, 직원이 불응할 경우 해당 직원의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음.

5. 통제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는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 ▶ 답변: 종료할 수 없음. 회사는 통제기간 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됨을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함.

6. 통제기간 동안, 마침 회사의 월급날일 경우, 회사는 급여를 지연 지급해도 되는지?

- ▶ 답변: 가능함. 통제 사유로 인해 회사가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직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추후 통제 종료 후 즉시 급여를 발급해야 함. 회사의 주관적 악의에 의한 지급 지연이 아닐 경우, 이는 ‘제때에’ 근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함.

범무법인[유] 지평